

전남 보건교사 배치비율 '전국 최하'

58.4%...서울·광주 등 대도시 90% 이상

김광수 의원 "보건교사 확충, 지원인력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감염증 확산방지 1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지역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당 의원 논평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전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8.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10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9.9%, 대구 99.6%, 부산 99.4%, 광주 99.1%, 세종 93.2%, 인천 92.1%, 대전 81.6%, 울산 80.6%였다.

강원 60.7%, 전북 61%, 제주 64.4%, 경남 64.5%, 충북 64.6%, 경북 66%, 충남 66.3%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에 대응하는 일은 전문성 때문에 보건교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전남,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지금까지도 보건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감염병 지임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충과 지원 인력 투입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봉우 기자

'신종 코로나' 광주·전남서 개학 연기·휴업 학교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개학이 연기되거나 휴업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가격리된 교직원과 학생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보건당국에 의한 시설 격리자 4명(확진자 자녀 2명,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탑승한 1명, 중국 방문 후 증상을 보인 1명)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자가격리자 등이 지역별로 공개될 경우 상황통제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지역별 분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격리자가 있는지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상황통제 등이 어려운 만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확인 결과 신종 코로나로 학사일정이 조정된 유치원이나 초·중·고 특수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전남에서 격리된 교직원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5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3명의 능동감시자와 24명의 증상 모니터링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광주 13명, 전남 11명으로 나타났다.

조인호 기자



삼성화재 노조 출범 기자회견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삼성화재 노동조합 출범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상훈 노조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창립 68년 만에 처음이다

영산강청, 5개 광역상수원 상류 오염원 집중매수

수계관리기금 164억원 투입 토지 매수 계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주암호, 동북호 등 광주·전남 5개 광역상수원 상류지역 토지 등 오염원을 집중매수한다고 3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2003년부터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 등을 매수해 수변녹지나 비점저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영산강청은 전체 매수대상 토지 689.1㎦ 중 여의도 면적 약 6.6배

인 19.1㎦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하고 생태학습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산강청은 올해 수계관리기금 164억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토지 매수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 받은 토지 중 △상수원 유입 하천으로부터 거리 △오염부하량 발생 정도 △협의매수 의사 등

을 고려해 매수지를 최종 결정한다.

상반기 매수 절차는 1월 대상 토지 선정, 해당 지자체 협의, 2~3월 현지조사, 4~5월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 금액으로 매도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6월 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반기에는 잔여대상으로 8월부터 매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등 매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매도신청서를 작성해 영산강청 상수원관리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상훈 영산강청 청장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상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8

우한폐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확진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오늘부터 환자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관리도 1대1 철저"

보건당국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감염 증상을 보일 때 만났거나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모두를 '자가격리' 조치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4일부터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해오던 기존 체계를 일괄 '접촉자'로 구분할 것"이라며 "이 대상에 들어가면 모두 자가격리 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일상접촉자는 외출을 강제할 수 없는 능동감시 대상이었다. 따라서 외출동행이 가능한 능동감시 대상자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로

검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침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발열이나 기침 등을 보이는 확진자와 2미터 이내로 접촉한 사람 그리고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자가격리자는 일대일 담당자로 지정된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관리된다"며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해 조치와 협조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8번째 확진자 다녀간 사우나 이용자 찾아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8번째 확진자가 사우나(목욕탕)를 들른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접촉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확진환자인 A씨(63·여)는 당초 지난 달 26일 외부활동이 없었다고 조사됐으나 군산시 월명동에 소재한 사우나 등을 방문한 사실이 1일 심층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즉각 대응팀은 카드사용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의 추가 동선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입구에만 설치돼 있는 관계로 접촉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3일 현재까지 사우나 방문자 1명에 대해서만 카드전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자가격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경찰에 의뢰해 목욕탕 입구, 주변 폐쇄회로 분석을 통해 A씨가 방문한 시간대의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다.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